

## 이석민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과학연구팀

## 소득이동통계로 본 한국의 이동성 구조: 이동성과 고착의 공존

- 행정자료 기반 소득이동성과 청년층 지역이동 결합분석(2017~2023) -

- 본 연구는 소득이동통계 심층분석과 청년층 지역이동 분석을 결합하여 한국의 소득이동 구조를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 분석 결과, 한국의 소득이동성은 '계층 고착(하위/상위)'과 '선택적 이동(특히 청년층 지역이동에 의한 소득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를 보인다.
-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개인 소득 상승(평균 +22.8%)의 주요 경로이나, 동시에 지역 간 인적자본 격차를 확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 소득이동통계는 단순 분배지표를 넘어 정책 수요 결정, 지역균형발전, 사회이동성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통적 소득분배 지표는 특정 시점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위치 변화(이동성)는 포착하지 못함
- 한국은 수도권 집중, 청년 이동 증가, 노동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 구조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기회의 이동 경로'가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이동과 노동시장 진입이 결합된 집단으로, 소득이동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대상임
- 본 연구는 소득이동통계의 구조를 정리하고, 청년층 지역이동과 결합하여 한국의 이동성 메커니즘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연구질문) 한국의 소득이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며,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 데이터 및 방법

- **(활용데이터)** 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통계\* 2017~2023년  
 \* 연간 약 1,100만 명 규모(전체 인구 약 20%) 종단 데이터(인구·가구 등록센서스 +국세청 자료 연계)
- **(주요 변수)** 근로·사업소득, 소득분위(5분위), 연령, 성별, 지역(수도권/비수도권, 5극3특)
- **(분석방법)** 소득분위 전이행렬, Fields-Ok 및 Shorrocks 이동성 지수, 소득 증감률(절대 이동성), 분위 이동(상대 이동성), 지역 간/내 이동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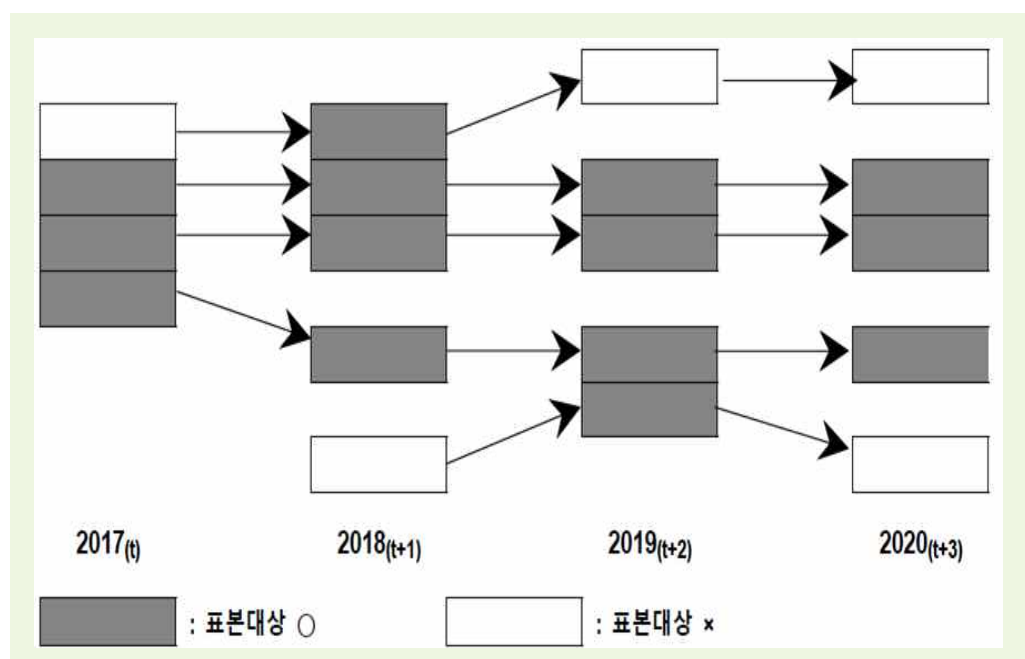
<표1> 소득이동통계 특징

① 다출처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 결합</li> <li>· 향후, 행정자료 추가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확장성 및 효율성 증대</li> </ul>
② 대규모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센서스 가구단위 20%* 표본의 가구원(개인) 대상</li> <li>* 2022년 표본 규모 : 1,162만 명(496만 가구)</li> </ul>
③ 패널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총량 변화를 파악하는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종단면 변화 및 이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형태의 데이터 구축</li> </ul>

### 패널 데이터(Panel data)

-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라고도 불리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는 데이터
-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정보 등의 다양한 변화를 추적하여 데이터를 구축

[그림1] 소득이동통계 표본 가구원 유입 및 이탈 모형



##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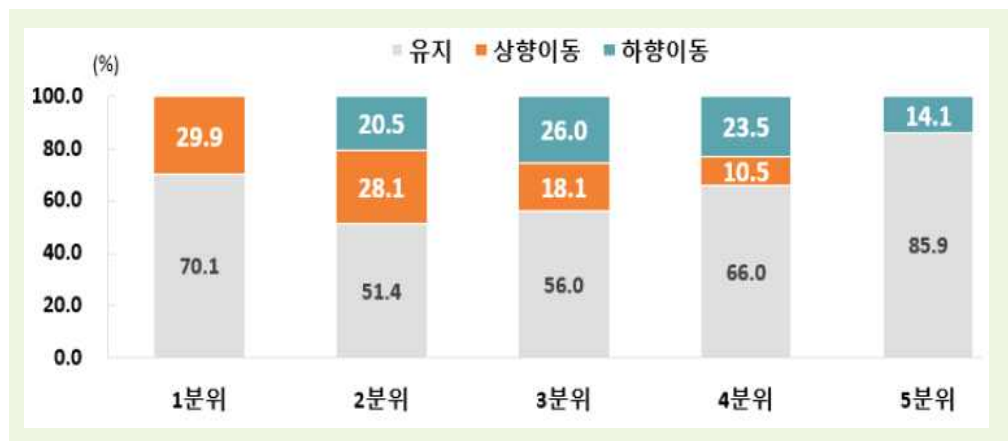
### ○ 소득이동통계의 구조적 전환

- 기존 횡단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동태적 분배 구조' 분석 가능
- 소득이동성은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결과의 평등'을 특정하는 소득분배지표와 구별

### ○ 소득 계층 고착과 이동의 공존

- 하위 분위: 저소득층 잔류 비율 높음 (하위 고착)
- 상위 분위: 고소득 유지 확률 높음 (상위 고착)
- 중위 분위: 상·하향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완충 구간

[그림2] 소득분위별 이동비율,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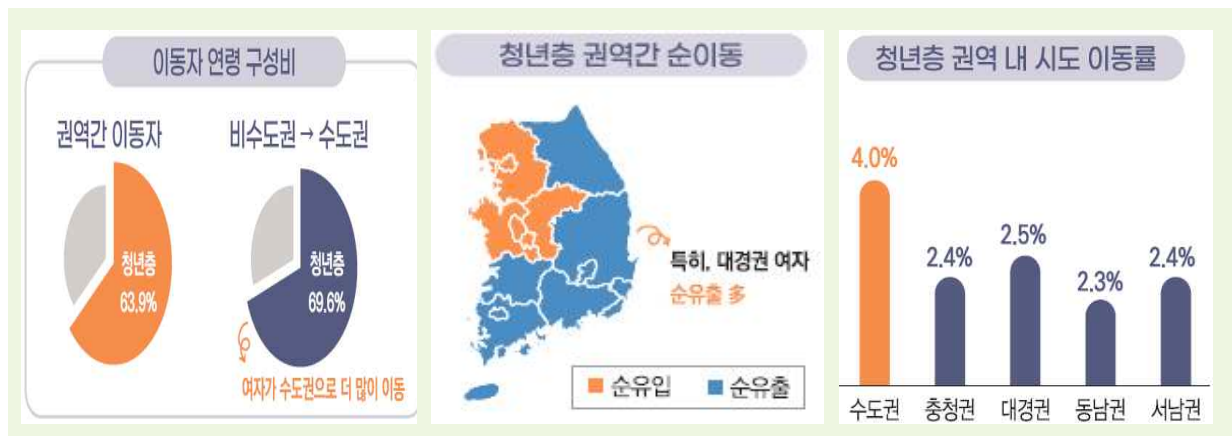


- 소득원천, 인구특성, 분석단위별로 소득이동성 격차 존재
- 소득이동성 단일 지표가 아닌 복합적 해석 필요

### ○ 청년층의 이동 집중 구조

- 전체 소득이 있는 인구의 권역 간 이동 중 청년층이 약 63.9% 차지
- 수도권 유입 인구 중 약 70%가 청년층, 청년층이 '이동성의 핵심 집단'

[그림3] 소득 있는 청년층(15~39세)의 이동특성, 2022→2023년



**주요 결과**  
(계속)

○ 청년층 지역이동과 소득 상승 효과

- 수도권 이동이 소득 상승 경로로 작용
- 여성 청년의 수도권 이동 비중 및 소득 상승효과가 더 높음

<표2> 청년층의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 만 원, %)

성별	기준 연도	이동자		비이동자	
		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남녀 전체	2022년	2,439	2,693	3,187	2,884
	2023년	2,996	2,897	3,545	3,233
	증감률	22.8	7.6	11.2	12.1
남자	2022년	2,911	3,069	3,683	3,374
	2023년	3,531	3,423	4,100	3,796
	증감률	21.3	11.5	11.3	12.5
여자	2022년	1,918	2,222	2,670	2,287
	2023년	2,406	2,239	2,966	2,547
	증감률	25.5	0.8	11.1	11.4

-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동 후 소득 증가폭 크게 나타남

[그림4]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소득분위 구성비 변화, 2022→2023년



- 권역별로는 대경권 및 동남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상승이 크게 나타남
- 특히, 청년 여자의 권역 간 이동과 비이동의 소득증감률 차이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남. (특히, 대경권 청년 여자)

[그림5] 유출 권역별 이동에 따른 청년층 소득증감률, 2022→2023년



## 시사점

- **소득이동성의 정책적 재해석**
  - 소득이동통계는 '결과'가 아닌 '기회 구조'를 측정하는 지표
- **청년 이동의 이중 효과**
  - (개인) 소득 상승 기회 제공, (지역) 인적자본 유출로 격차 심화
  - 장기적으로 지역 불균형 고착 및 사회 이동성 제약 가능
- **정책 방향**
  - 이동 억제보다 지역 내 기회 창출 중심 정책 필요
  - 양질의 일자리, 교육·훈련 인프라, 정주 환경 개선
- **통계 인프라 활용**
  - 행정자료 기반 종단데이터는 정책 효과 평가 및 타겟팅 핵심 도구
  - 향후 사회이동성 통계로 확장 필요

## 한계 및 향후 연구

- **(소득원천 확장)** 및 공적이전 소득/지출 추가 반영 필요
- **(변수 추가)** 자산, 일자리, 교육 등의 사회 전반을 분석할 수 있는 변수 추가 필요
- **(향후 과제)** 일자리 관점의 소득이동성 분석, 지역 단위 이동성 지표 개발, 교육·건강 등 다차원 연계, 세대 간 이동성 분석 등

## 참고 문헌

- 국가데이터처(2025),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 국가데이터처(2025),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도자료
- 국가데이터연구원(2025), "소득이동통계 심층분석 연구"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 (연구보고서 원본) 국가데이터연구원홈페이지 > 연구간행물 > 연구보고서 > 소득이동통계 심층분석 연구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의 내용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리서치 브리프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국가데이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행 일 2026년 4월 30일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 행 인 김 진

주 소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6~8층

전화번호 042-366-7118

홈페이지 [mods.go.kr/dsri](https://mods.go.kr/dsri)